

제목 : < 87년 이후 노동 20년 :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와 전망 > 발표 내용

- ◆ 우리 연구원에서는 「87년 이후 노동 20년 :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평가와 전망」과 관련한 개원 19주년 기념 토론회를 9
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CCMM빌딩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발표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 발표 논문

발 제1: 「유연성과 안정성의 교환? : 잃은 자와 얻은 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발 제2: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소장

발 제3: 「통계로 본 노동 20년」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발 제4: 「의식조사로 본 노동 20년」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유연성과 안정성의 교환?: 잃은 자와 얻은 자

질문1. 핵심-주변 고용의 관련성?

청년남성이나 장년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현실이 장년층이나 고령층 남성노동자의 강고한 고용유지에 기인하는 것인가?

- 1987년 이후 최근까지 인구집단별 고용율의 특징은 청년남성의 고전과 청년여성의 약진, 그리고 30~40대 여성의 담보로 요약됨
 - ※ 20-24세 남성 55%→43%, 25-29세 남성 84%→72%,
25-29세 여성 40%→65%
- 청년남성의 고용부진은 장년층과 고령층 남성의 노동시장 지위의 강고함이나 청년여성의 약진에 따른 상쇄효과로 보기 어려움
 - 시계열분석에 따르면, 20대남성의 고용율은 30-40대 남성이나 20대 여성의 고용율의 증감과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가짐

질문2. 고용-유연화(비정규직비율)의 관련성?

질문2-1.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용율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 고용율과 비정규직비율은 부(negative)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고용율과 비정규직 비율은 모두 경기순응적으로 증감해 옴
 - ※ ‘경제활동인구조사’ 1983~2006년 월별자료 시계열분석
- 이러한 현상은 그간의 비정규직 고용확대가 합리적인 유연화전략이라기보다는 당장의 인건비 절감방안으로 추진되어 온 것일 가능성을 시사함
 -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확보가 비정규직 확대의 주된 동력이었다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을 것임

질문2. 고용-유연화(비정규직비율)의 관련성?

질문2-2. 비정규직 취업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이동성의 증가는 고용율 증가에 도움이 되는가?

- 청년남성의 경험에 따르면, 노동시장에서 이동성의 증가가 고용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음
 - 청년남성의 고용부진은 이들의 노동시장 유연성이 부족해서라거나, 정규직을 고집하기 때문으로 볼 수는 없음
 - 청년층 남성은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매우 높은 이동성을 경험하였고
 - [비정규→정규] 전환은 물론이고, [미취업→정규], [미취업→비정규] 전환에서도 청년여성보다 높은 전환율을 보였음

- 청년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전환율을 보인 부분은 최종학교 졸업 후 첫 직장 진입과정

※ 청년남성(1.0) 대비 청년여성의 고용상태 전환의 순간전환율:

비정규→정규(0.57), 미취업→정규(0.49), 미취업→비정규(0.64),

졸업후 미취업→정규(1.2), 졸업후 미취업→비정규(1.35)

※ 순간전환율: 장기적인 관찰기간 중 불특정한 매 순간에 한 고용상태에서 다른 고용상태로 전환하게 될 확률

노동시장 불안정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 20여 년간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를 고용 변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
 - 특히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노동시장의 불안정이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

□ 시장소득 불평등의 심화

- 외환위기로 급격히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는 2003년부터 다시 악화되고 있으며, 2006년 들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80년대 초반 수준을 기록
 - ※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 : '82 0.309 → '96 0.285 → '99 0.304 → '06 0.303
 - ※ 전국가구 지니계수 : '03 0.336 → '06 0.344
 - ※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
- 외환위기 이전인 1986~1996년에는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계층까지 파급됨으로써 소득분배가 개선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6~2006년에는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지위 하락에 의해 소득불평등 심화
 - ※ 도시근로자가구의 5분위 소득점유율 (1분위, 5분위) :
'86 8.1%, 38.6% → '96 8.5%, 37.0% → '06 7.5%, 37.8%
- 직접세 및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시장소득 불평등 개선효과는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

무름.

※ 도시근로자가구에서 직접세 및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재분배 효과 (%) :

'82 2.6 → '96 2.4 → '06 4.2

※ 고령화 효과를 제거하고 난 후 직접세 및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재분배 효과는 OECD 19개국이 26.3%인 반면, 우리나라는 5.0%에 불과

□ 빈곤 문제의 심화 및 근로빈곤 문제의 대두

○ 상대빈곤율 또한 외환위기 직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6년 들어 소폭 하락하였지만 80년대 초반보다 높은 수준

※ 도시근로자가구 상대빈곤율(%)

: '82 10.2 → '96 9.1 → '99 10.5 → '06 10.8

※ 상대빈곤율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미만인 개인의 비중

○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대빈곤율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함

- 2006년 전국가구의 상대빈곤율은 14.7%를 기록하여, 2000년 OECD 회원국의 평균 10.4%에 비해 높은 수준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빈곤층의 59.9%에 이르고 있으며, 일하고 있는 빈곤층 또한 30.6%를 기록하여, 미취업으로 인한 빈곤화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낮은 질이 빈곤을 초래하는 요인임을 시사

□ 성장의 분배 개선효과 약화

-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은 높아졌으나, 개인 소득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
 - 기업 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986~96년 8.5%에서 2000~06년 8.8%로 증가하였으나, 개인 소득은 1986~96년간 연평균 9.6%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0~06년에는 2.4% 증가로 둔화
- 영세자영업 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실질소득의 동반 감소
 - 자영업자의 연간 실질소득은 2000년 22.2백만원에서 2006년 19.8만원으로 감소
- 고용의 질 악화
 -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불평등을 요인분해하면, 소득분배가 악화된 1996~2006년의 불평등 증가는 임시일용직 가구의 증가와 그 상대적 소득의 하락에 기인
- 성장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둔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을 통한 상향 이동성이 크게 낮은 수준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행할 가능성은 13.8%에 머물러 EU15개국 평균 30.5%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더 높은 임금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16.2%에 머물고 있음

□ 소득불평등 확대와 저소득 근로

-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은 2001년 22.6%에서 2005년 26.6%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에 소폭 감소
 -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저임금 고용비중은 2006년 21.6%를 기록하여 2005년 OECD 평균 17.1%를 크게 상회
- 저임금 근로자는 3년 동안 미취업 4.6개월, 저임금 24.0개월, 중상위임금 7.4개월을 경험
 -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저임금 근로자가 미취업을 경험하는 기간이 2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중상위 임금계층으로 이동하는 비중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낮지만, 상향 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저임금 함정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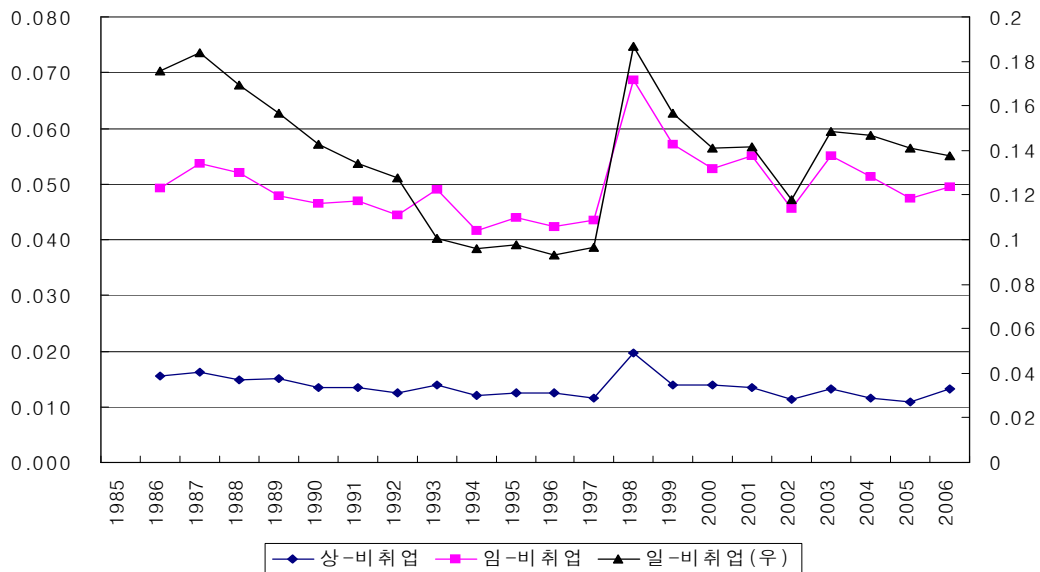
□ 정책적 시사점

- 시장소득의 불평등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대두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력의 약화, 비정규 고용의 고착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실직 위험의 증가 등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주된 요인이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에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청년 미취업자에게 치중한 노동시장정책과 계속빈곤층 중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간에 존재하는 광범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통계로 본 노동 20년

- 1987년 이후 20년이 흐른 시점을 맞이하여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를 정리하여 책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음.
- 87년 이후 20년에 대해 평가하는 개원기념토론회 종합토론에 앞서 지난 20년간의 변화를 보여주는 10개의 주요 통계를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함. 이하의 내용은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임.
- 전체적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노동시장 이동성이 감소하다가 반전되어 외환위기 이후 취업과 비취업을 이행하는 이동성이 증가함.
- 상용직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상용직에 머무를 확률에 변화가 거의 없고 비취업 및 비임금근로로의 이행확률에 큰 변화가 없으나, 임시·일용직, 특히 일용직이 비취업 및 비임금근로로의 이행확률이 크게 높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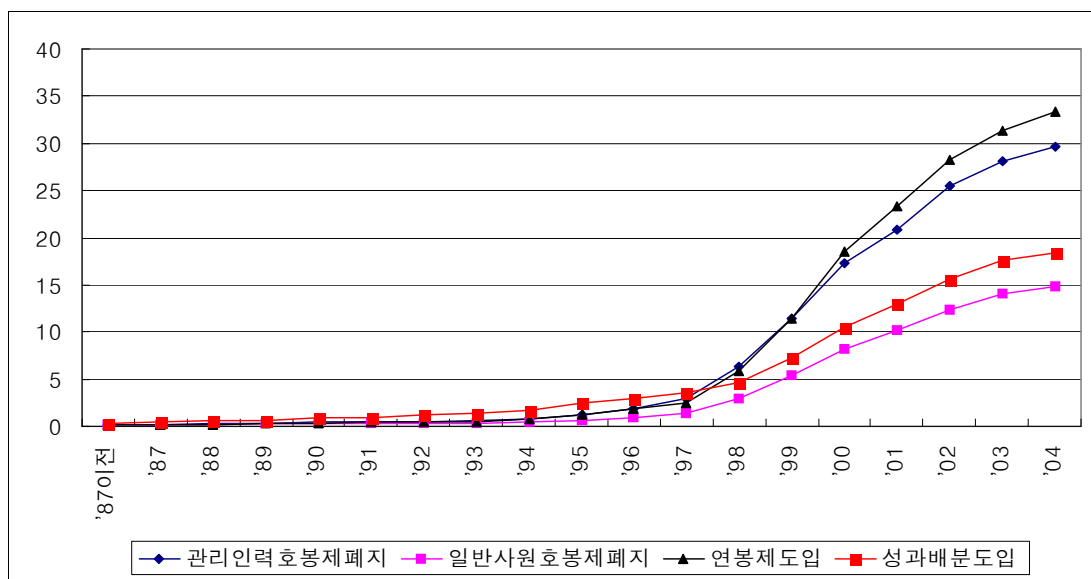
[그림 1] 비취업 및 비임금근로로의 이행확률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월간패널

- 임금체계는 과거의 강한 연공임금구조에서 탈피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빠르지 않음.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났음.

[그림 2] 호봉급 등 임금체계 변화 추세



주1: 조사시점이 2004년 5월이며 100인 이상 사업체임(N=4,370).

주2: 호봉제 폐지 추세는 해당 인력에 원래 호봉제가 없다고 응답(관리인력 2,179개, 일반사원 1,724개)한 경우를 제외한 집단에 대해 중도에 호봉제를 폐지하였다고 응답(관리인력 671개, 일반사원 412개)한 사례 중 폐지년도 질문에 응답한 경우를 분석.

주3: 연봉제와 성과배분제의 도입추세는 각 제도를 도입(연봉제 1,829개, 성과배분제 1,259개)한 경우 중 도입년도 질문에 응답한 경우를 분석.

자료: 노동부(2004), [연봉제·성과배분제 실태조사], 원자료.

○ 전반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하락한 가운데 산업별로 조합원수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 하락이 현저하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함.

〈표 6〉 산업별 조합원수 및 임금근로자수 변동의 비교

(단위 : 천명, %)

산업별	1993년	비중	2005년	비중	조합원수 증감률	임금근로자수 변화율(93~05)
농림어업광업	20,994	1.2	44,093	2.9	110.0	-37.5
제조업	739,394	43.1	413,083	27.6	-44.1	-12.3
전기가스수도	32,446	1.9	31,610	2.1	-2.6	69.0
건설	20,773	1.2	36,501	2.4	75.7	31.0
도소매	64,877	3.8	10,460	0.7	-83.9	1.9
음식숙박업	18,681	1.1	23,892	1.6	27.9	63.6
운수통신업	409,337	23.9	327,774	21.9	-19.9	51.3
금융보험업	204,763	11.9	153,346	10.3	-25.1	-19.1
각종서비스업	203,247	11.9	454,742	30.4	123.7	83.4
합 계	1,714,512	100.0	1,495,501	100.0	-12.8	23.7

주 : 1) 각종서비스업에는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그리고 가사서비스업이 포함됨.

2) 서비스업 전체(도소매음숙, 운수, 금융 포함)로는 근로자수는 42.2%, 조합원수는 7.7% 증가

3) 조합원수 일부 누락 등에 따라 공식통계와 약간의 수치 차이가 있음.

자료 : 조성재·김정우(2007)를 일부 수정, 임금근로자수 변화는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의거.

의식조사로 본 노동 20년

□ 조사의 주요 결과

○ 노조활동의 현실과 향후 기대 간의 차이

- 노동조합 활동의 현실과 향후 기대를 비교하여 보면, 근로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개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 개선 등 지나친 실리 추구에 비판적이며 사회적 역할에 더욱 힘을 쓰도록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들은 1989년에 비해 노동조합 요구와 활동의 사회적 정당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평가도 부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정치민주화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평가도 낮추고 있음.

○ 조사결과의 함의

- 노동조합 활동이 현재와 같이 실리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경우 노동조합의 사회적 고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은 노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자신들을 위한 실리보다는 취약계층 보호, 고용안정, 사회제도 개혁 등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노사관계가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노동

시장의 불평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함.

□ 의사조사결과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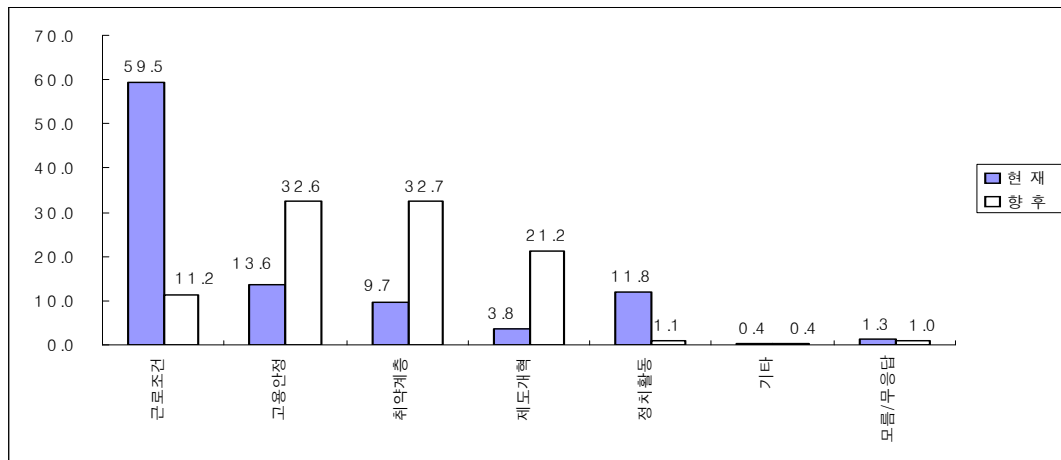
○ 노동조합 활동의 현실과 향후 기대 비교

- 노동조합 활동이 근로조건 개선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취약계층보호, 고용안정, 사회제도개혁 등의 분야에서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함.

〈표 1〉 노조활동의 현실과 향후 기대 비교

	노조활동의 현실	노조활동에 대한 기대	차이
근로조건 개선	59.5%	11.1%	48.3%
취약계층 보호	9.7%	32.7%	-23%
고용안정	13.6%	32.6%	-19%
사회제도개혁	3.8%	21.2%	-17%

[그림 1] 노동조합 활동의 현재와 향후 기대



- 임금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은 21.1%에 불과했으며, 고용안정(33.3%), 자기개발 및 성장(25.3%), 인간관계(19.9%) 등을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었음.

○ 근로자 처우의 상당한 개선, 근로자 요구의 정당성의 저하 성장, 우선 정책 찬성

<표 2> 근로자 대우, 요구, 성장책에 대한 태도

	1989년	2007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27%	54.8%
사용자의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71.5%	43.8%
근로자 요구가 정당하다	67%	41.3%
근로자 요구가 과도하다	32.4%	57.1%
최근 근로자의 임금인상 요구가 지나치다		70.3%
성장 우선정책에 찬성한다		76.5%
경제성장을 위한 노조활동의 자제 필요		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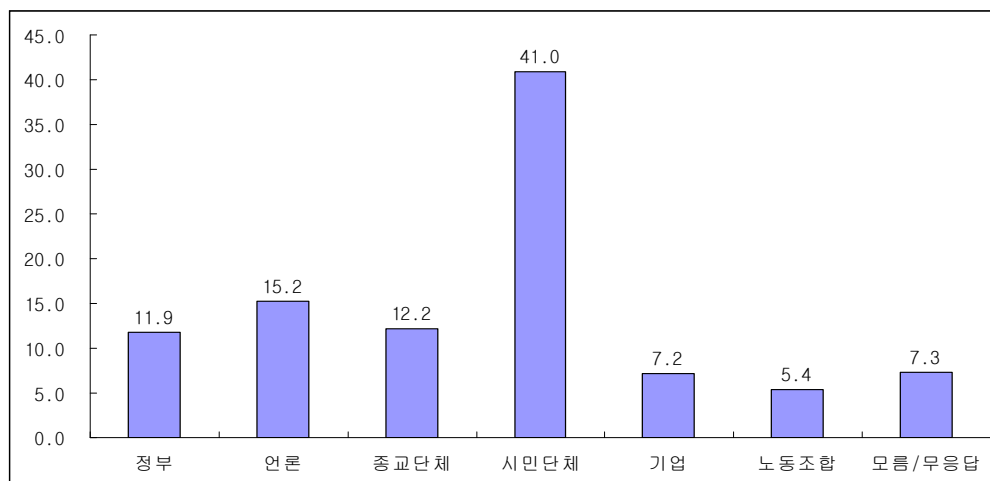
○ 노동조합의 국민경제적, 사회정치적 기여 역할의 감소

- 노조의 국민경제적 기여와 사회정치적 기여 효과가 198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부정적 효과가 커진 점이 주목됨.
- 이런 영향에 따라서 노조의 신뢰도가 다른 단체에 비교하여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3〉 노조의 국민경제적, 정치사회적 역할

노조활동의 효과		1989년	2007년
경제성장	긍정적	53.3%	16%
	부정적	26.4%	57.8%
물가안정	긍정적	35.9%	12.3%
	부정적	41.2%	53.9%
정치적 민주화	긍정적	61.7%	35.4%
	부정적	11.2%	24.9%
사회불평등	긍정적	69.8%	40.2%
	부정적	5.7%	24.4%

[그림 2] 가장 신뢰하는 기관



<참고 자료 : 의식조사 개요>

- **조사 목적:** 국민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고, 지난 20년간의 국민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국민의식 변화의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함.
- **조사의 표본선정 :** 국민의 의식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성, 연령, 지역, 고용형태별 분포를 고려한 층화 표집을 실시하여 대표성 있는 전국표본을 구성하였음.
 - 최종 표본 크기는 2,000명이며, 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 기준 $\pm 2.2\%$ 임.
- 이번 200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 설문조사에서는 1989년 연구결과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의 크기도 비슷하게 맞추고 13문항을 1989년 설문조사에서와 똑같이 구성하는 등 높은 수준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였음.
 - 1989년 조사는 방문 면접 조사로 2007년 조사는 전화 조사로 이루어져 정보 수집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인식에 대한 응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표본특성 비교

		노동연구원('89)		노동연구원('07)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	남자	900	60.0	998	49.9
	여자	600	40.0	1002	50.1
연령	20대 이하	362	24.1	411	20.6
	30대	536	35.7	472	23.6
	40대	297	19.8	461	23.1
	50대 이상	233	15.5	656	32.8
학력	중졸이하	72	4.8	175	8.8
	고졸	575	38.3	574	28.7
	초대졸	534	35.6	312	15.6
	4년제	115	7.7	784	39.2
	대학원이상	246	16.4	147	7.4
	무응답	30	2.0	8	0.4
임금 근로자	예	527	35.1	823	41.2
	아니오	973	64.9	1177	58.9

○ 조사의 한계

- 1989년과 2007년 시점의 비교를 위해 1989년 당시 작성된 설문지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 최근의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등 핵심이슈들을 충분히 담지 못해 대개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진 점이 한계임.